

# 정부, SOC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축소키로

### 대상 기준 500억 이상서 1천억으로 상향 조정 MB때 배제된 광주~완도 고속도 사업 청신호

정부가 대형 국책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개편 방안이 관철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광주·전남 등 수도권 외 지역 대형 SOC 사업의 문턱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수도권과 외 지역의 불균형,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불합리 등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 등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지역 불평등 등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국회의원이라던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2008~2012년까지 지역구 분기 가능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69건 가운데 40.6%(28건)가 영남지역에서 진행됐으며, 호남은 8건으로 11.6%에 불과하다”면서 특정사업의 영남 집중 현상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순조롭게 진행돼 오다가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타당성이 기준(B/C)인 0.5에 0.003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며 “정권이 바뀌면 진행된 사업이 중지된다면 정책의 안정성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예비타당성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특히 “광주~완도 구간은 사업추진이 중지된 반면, 광주~완도와 비교해 사업 타당성이 떨어졌던 영남지역의 광주~영덕, 포항~삼척 고속도로는 예산이 반영돼 정부가 예산배분의 형평성 원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현재 광주~완도 고속도로에 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장병완 의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잘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공사비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조정 등 예타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기재부 내외에서는 국회의원 10명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이고 국고 지원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으로 따지는 경제성 중심의 평가에서 지역균형 등 정성적 평가 부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여의도 정치권 ‘하한정국’ 없다 선거·세월호·국감으로 더 ‘후끈’

### 올 201일 중 149일 문 열여 당리당락 집착... 정치력 부재 8월 국회도 주요 법안 공방

6·4 지방선거와 박근혜 정부 2기 개각에 이어 7·30 재보궐 선거와 세월호 후속대책 마련, 국정감사 분리 실시 등 각종 정치현안과 전국 선거가 이어지면서 201일 중 149일 동안 국회가 열린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총 119일 소집)보다 7월 7일에 이어 8월에도 국회를 여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17일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무산되자 21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여기에 8월 초로 예정된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청문회도 여름 국회를 뜨겁게 달군 전망이다.

특히, 여야가 올해부터는 국정감사를

2회 분리 실시키로 하고 1차 국감을 8월 26일 시작키로 합의함에 따라 8월 국회 소집이 예정된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국정감사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등 주요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게 된다.

이 같은 숨 가쁜 정치 일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5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는 단 한 건의 법률안도 통과시키지 못한데 이어 세월호 특별법 처리라는 여야 합의도 지키지 못했다.

이는 여야의 정치력 부재 탓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야가 소통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재현 관제사는 “하반기에는 여야가 서로 한 걸음 양보하며 민심이 수렴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 피격사건으로 숨진 승객과 승무원 298명의 국적이 12개국으로 최종 확인된 가운데 폭발된 비행기 잔해 위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야생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 말레이 항공기 피격 12개국 298명 사망

### 우크라이나 반군이 격추 추정 한국 국적 탑승자 없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 피격사건으로 숨진 승객과 승무원 298명의 국적이 12개국으로 최종 확인됐다.

말레이시아 언론들은 마지막까지 확인되지 않은 탑승자 3명의 국적이 네덜란드 국적자로 파악됐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레위기 종 주 유엔 베트남 대사는 18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자국민 3명이 피격 항공편에 탑승했다고 했지만 이후 이들이 네덜란드

국적의 베트남계 여성 응웁 응옥 밍(37)씨와 그녀의 자녀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사망자의 국적은 네덜란드(191명, 네덜란드·미국 이중국적자 1명 제외), 말레이시아(44명, 승무원 15명 포함), 호주(27명), 인도네시아(12명), 영국(9명, 영국·남아공 이중국적자 1명 제외), 독일·벨기

에(각 4명), 필리핀(3명), 캐나다·뉴질랜드·미국·남아공(각 1명) 등 12개국이었다.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밝혔던 미국인 1명도 네덜란드와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였다. 한국 국적의 탑승자는 당국의 1차 발표대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사고 수습을 위해 탑승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에 1차로 5000달러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광주시, ‘뿌리산업’ 집중 육성

### 100억 들여 용접 R&D센터

광주시가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 ‘뿌리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20일 “자동차, 조선, IT 등 주력 산업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남부대학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8월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시 제품 제작, 인력양성 교육, 해외 시장 개척 컨설팅, 인증 및 특허지원 등을 해당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난 1월 제정·공포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늦어도 올 연말 내에 인력양성, 연구개발, 공정 자동화 및 첨단화,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특히 첨단산업단지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지역본부 내에 총사업비 100억 원(장비 구축 80억원·센터건립 20억원)을 투입해 용접·접합 R&D지원센터를 내년 9월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용접·접합 R&D지원센터는 개관과 동시에 기술, 교육, 시험생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김세훈 광주시 전략산업과 전자금형산업담당관은 “뿌리산업의 진흥·육성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광·금형, 가전산업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면서 “특히 뿌리산업은 민선 6기 핵심사업 중 하나인 연간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7월 30일(수)

잠시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투표함

##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7월 30일(수) 투표할 수 없다면  
7월 25일(금)~26일(토) 사전투표하세요

-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장소: 선거실시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방법: 별도 신고없이 신분증만 가지면 투표가능

선거실시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 나주시·화순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광주광역시(읍)

침단1동, 침단2동, 신가동, 수원동, 비아동, 하남동, 임곡동, 신창동

공명선거 홍보대사 MBC아나운서 김소영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 19세 이상(1995. 7. 31.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습니다.